



파시스트가
이탈리아 총리가
되다
2~3면

우크라이나
전쟁
3, 16면

알렉스 칼리니코스 칼럼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과
파운드화 붕괴
4면

9.24
기후정의행진의
의의
5면

중국 혁명(1925~27년)과
트로츠키
8~10면



이탈리아로부터의 경고등!

파시스트는 단순한 극우가 아니다

관련 기사 2~3면

(온라인에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로부터의 경고!

파시스트가 G7 회원국의 총리가 되다

사이먼 바스케티

파시스트인 조르자 멜로니가 이탈리아 총리직을 거머쥐게 됐다.

9월 25일(현지 시각) 출구조사 결과에서 멜로니의 극우 선거연합은 득표율 41~45퍼센트로 선두를 달렸다.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기에 충분한 득표다.

멜로니는 이민자에 적대적인 정당인 동맹당의 지도자 마테오 살비니, 극도로 부패한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선거 동맹을 맺었다. 총리직은 멜로니 차지가 될 듯하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은 총투표수의 22~26퍼센트를 득표한 듯하다. 이는 나머지 동맹 세력들의 총 득표보다 많은 것이다. 이탈리아형제당은 “하느님, 조국, 가족”을 구호로 내걸고 선거 운동을 벌였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 선거연합은 하원의 전체 400석 중 227~257석을, 상원의 전체 200석 중 111~131석을 획득할 듯하다.

멜로니는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려고 이민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멜로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조직의 명령을 받고 마약을 팔거나 자신의 성을 팔러” 이탈리아로 이주한다고 주장했다.

멜로니는 지난해 출간된 자서전에서 자신이 “대교체” 음모론의 신봉자임을 드러냈다. “대교체” 음모론은 조지 소로스 등의 국제 금융계의 거물들이 유럽의 기독교 정체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더 쉽게 통제하려고 이민자들을 유럽으로 마구 유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멜로니는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무슬림 침략자’들에 맞서 유럽을 수호해야 한다



파시스트인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은 무솔리니 지지자들의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 주장하는 것을 열렬히 지지했다.

멜로니는 올여름 스페인에서 극우 정당 ‘복스’가 주최한 집회에서 “성소수자 로비단체”와 “국제 금융 큰손”들에 “반대”하자고 외쳤다.

멜로니는 정부가 “이탈리아인의 멸종”을 막기 위해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멜로니는 이탈리아형제당의 로고에 있는 불꽃 이미지를 자랑스러워한다. 그 로고는 이탈리아형제당의 뿌리가 이탈리아사회운동당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무솔리니 추종자들이 창당한 이탈리아사회운동당도 같은 이미지를 로고로 썼다.

멜로니는 무솔리니를 이렇게 찬양했다. “무솔리니가 한 일은 모두 이탈리아를 위한 것이었다. 무솔리니 같은 정

치인은 지난 50년간 없었다.”

이탈리아형제당은 전임 정부들이 긴축을 추진하다 연이어 붕괴하는 동안 야당으로 남아 득을 봤다.

이탈리아형제당을 제외한 모든 주류 정당은 은행가 마리오 درا기가 이끈 지난 정부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좌우를 막론하고 이들 모두 인기를 잃었다.

의회 내 좌파들은 자신들이 지난 10년간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를 자행하다 실패한 후 총리로 지명된 이 은행가마저 실패했다고 겁에 질려 한탄하고 있다. 이들은 극우에게 정치적 공백을 메울 기회를 줬다.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회복 기금에서 2000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했다. 이전에 유럽연합의

구제 금융은 긴축 정책 시행을 조건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점은 멜로니를 비롯한 우익들이 유럽연합 비판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다.

멜로니는 유로화 반대 입장을 폐기했지만, 유럽연합이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감내하라고만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고 비난하며 이제 유럽연합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새 연립정부를 구성할 극우 동맹 안에도 긴장이 있다. 멜로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지만, 살비니는 제재에 반대했다. 지난주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바라는 것은 그저 “선량한 사람들”로 새 우크라이나 정부를 꾸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살비니와 베를루스코니 모두 은행가 درا기의 ‘국민 통합’ 연정을 지지했다가 나중에는 지지를 철회해 7월에 이 연립정부를 붕괴시키는 데 일조했다.

살비니는 내무장관이 되고 싶어한다. 살비니가 이끄는 동맹당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당시 34퍼센트를 득표했지만 이번에는 10퍼센트도 득표하지 못했다. 살비니는 전임 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지냈면서, 자기 명망을 높이는 데에 그 자리를 톡톡히 활용했다. 이후 살비니는 이탈리아로 건너오던 이민자들을 바다에 내팽개쳐 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

멜로니는 이 재판을 구실로 살비니가 내무장관직을 다시 맡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집을 유지시키는 축은 이민자에 대한 적대다. 멜로니는 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을 옹호하는

▶ 3면으로 이어짐



제국주의간 전쟁이 우크라이나 밖으로 번지고 있다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빼앗긴 영토를 수복할 수 있게 된 것에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의 불길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쪽 변경으로 번지는 것에는 침묵한다.

지난주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대대적으로 포격을 퍼부었다.

이와 거의 동시에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에서도 탱크와 박격포가 포격을 주고받으며 분쟁이 재개됐다. 더 서쪽에서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분쟁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몰도바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공통된 요인이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막대한 군사 지원 때문에 “근의 지역”[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유럽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하던 지역 통치자

들에게 기회가 됐다.

서방의 개입은 훨씬 직접적인 방식으로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기도 하다.

에너지를 구하려 눈이 벌게진 유럽 연합은 석유·가스가 풍부한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동맹을 맺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아르메니아는 지금보다 더 러시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서방 제국주의의 강화를 통한 러시아 제국주의의 지배력 약화는 민족의 자주성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이는 분쟁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3호 / 번역 김준호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약화시키려 하고, 이는 다른 곳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 2면에서 이어짐

데에 앞장섰고, 북아프리카에서 바다를 건너 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해상 저지선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살비니는 가마르호(號) 갑판 위에서 선거 운동을 벌였다. 가마르호는 이탈리아령 람페두사섬 연해에서 난민들을 구조했던 배다. 살비니는 줄무늬 수영복 바지를 입고 이탈리아가 “유럽의 난민 캠프”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보로 살비니는 우익 지지층을 다잡았을 것이다. 다른 공약들보다 저렴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행보는 기업주들을 동요하게 할 위험도 없다. 이는 펠로니와 살비니의 핵심 관심사이기도 하다. 펠로니와 살비니는 지난 몇 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를 감당할 돈을 벌리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살비니가 가마르호를 다녀간 후, 난민 수용소의 의사 안젤로 파리나는 올해 7월에 난민 2100명이 침대 310개를 나눠 써야 했으며 “위생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해졌다”고 했다.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은 선거 운동 막판에 지지율이 치솟았지만 역부족이었고, 투표율 저조는 오성운동의 근거지인 이탈리아 남부에서 더 두드러졌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 하나는 지금도 계속되는 홍수다. 기후 위기가 경제 위기와 결합된 상황이 이탈리아인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다. 식당 주인들이 음식값이 치솟은 이유를 해명하려고 전기·가스비 고지서를 가게 창문에 붙여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들과 로마인[집시]은 이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들은 새 정부 하에서 두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도파와 은행가 출신 관료들이 새 정부에 맞선 저항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은 파시스트에게 집권 기회를 준 자들이다.

10월이 끝나기 전에 새 정부가 수립되는 않을 듯하다. 저항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그 저항은 파시스트가 총리직에 앉을 기회를 열어 준 실패한 정책들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4호 / 번역 김준호

추천 영상



유럽의 새 극우와 파시즘

youtu.be/lcG7amGBH-s



추천 소책자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온 트로츠키 지음, 최일봉 옮김,
노동자연대, 74쪽, 3,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운드화 가치 급락: 영국발 금융 공황이 올 것인가?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와 재무장관 퀴지 콰팅이 내놓은 [대규모 감세 정책 등의] “재정 이벤트”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가장 신랄한 것은 전 미국 재무장관 로런스 서머스의 비판일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영국은 침몰하는 신흥국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는 영국 파운드화의 붕괴를 두고 하는 말이다. 9월 26일 파운드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새 보수당 정부에 대한 금융 시장의 대대적인 불신임 투표다.

논평가들이 말하는 “신흥국” 위기란 1990년대 초 멕시코에서 오늘날 터키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에서 되풀이돼 온 위기를 말한다. 이런 나라들은 보통 달러로 된 막대한 외채에 힘입어 잠깐 동안 호황을 누렸다. 그러다 거품이 터지면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외환 시장에서 폭락했고, 그 결과 외채를 갚기 더 어려워져 위기가 악화됐다.

이런 식의 위기가 현재 전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논평했듯이 “거꾸로 된 환율 전쟁[보통의 환율 전쟁은 자국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이 한창이다. 세계 곳곳의 통화 당국들은 0.25퍼센트포인트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던 관행을 버리고 0.5나 0.75, 1퍼센트포인트 단위로 ...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금리 인상이 ... 어찌나 거셌던지 지난주 세계은행은 그런 조치들로 인해 세계 경제가 파괴적인 경기 후퇴를 겪을 것이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상품의 가격이 달러로 매겨진다. 그러므로 연준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채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채무자가 더 높아진 이자를 더 비싸진 달러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보수당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 지출 정책 발표 뒤,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영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 2022년 초 그 규모는 517억 파운드로 국민소득의 8.3퍼센트에 해당한다. 영국은 식료품과 공산품 수입 대금

트러스와 콰팅은 450억 파운드(약 70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자 감세가 연간 경제 성장률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2.5퍼센트로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시장은 트러스와 콰팅이 실패한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을 지불하기 위해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의 말처럼 “낮선 자들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 즉, 끊임없는 해외 자본 유입에 기대야 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영국은 이미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 때문에 영국은 현재 유럽의 물가 급등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 에너지 위기에 특히 취약해졌다.

트러스와 콰팅이 곤경에 처한 이유는 지난 23일 그들이 정부 지출을 막대하게 늘릴 태세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단지 위기에서 가구와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트러스와 콰팅은 450억 파운드(약 70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자 감세가 연간 경제 성장률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인 2.5퍼센트로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마거릿 대처의 후계자를 자처하지만, 그들의 정책은 1980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대 미국의 대통령이자 대처의 막강한 동맹자였던 로널드 레이건의 정책을 더 닮았다.

그러나 영국은 미국과 달리 세계 주요 준비 통화를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시장은 트러스와 콰팅이 실패한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영국 정부가 추가 지출에 쓸 돈을 더 비싼 이자를 내면서 조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가차없는 국제 통화의 압력으로 진퇴양난에 처했다. 이미 영국 중앙은행은 정부 정책이 낳을 물가 상승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애초 계획보다 금리를 훨씬 올리겠다고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주 9월 15일에 금리를 0.5퍼센트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이는 현재 잇따르고 있는 [미국 연준 등의] 0.75퍼센트포인트 금리 인상에 못미친다.

런던 금융가의 큰손인 도이체뱅크는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에 긴급 회의를 열어 금리를 더 올리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해서 《타임》의 경제 편집자의 표현을 빌리면 “중앙은행이 ‘무슨 수단이라도’ 동원할 태세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이체뱅크 소속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은 현재 영국의 실질 수익률과 환율하에서 영국이 대외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돈을 덜 의사가 없다는 뜻을 매우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러스와 콰팅이 그토록 떠받드는 시장이 어찌면 그들의 정부를 마비시킬지도 모른다.

번역 이원웅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운동이 보수 정부에 맞설 디딤돌을 놓다

2만 명이 넘게 참가한 9.24 기후정의 행진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절박감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 행동에도 나설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일차적으로는 대중의 실제 기후 재난 경험이 누적된 결과일 것이다.

올 여름 폭우와 태풍 힌남노뿐 아니라 지난 몇 해 동안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반복된 대형 산불과 기상 이변들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2020년에 시작된 팬데믹과 반복되는 재해 참사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잘 보여 줬다. 재난의 피해는 취약 계층에 집중됐고, 정부는 기업 이윤을 지키려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팽개쳤다.

9.24 집회에서 연설한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이렇게 분노했다.

“3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국가가 한 행동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감옥과 수용시설과 병원 같은 데서 코호트 격리를 발동시켜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8월에도 엄청난 홍수 속에서 발달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처참하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후 재난

앞친 데 뒤흔 격으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악화된 경제 상황과 생계비 위기는 취약 계층뿐 아니라 평범한 청년·노동자들의 삶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들의 투쟁이 광범한 사람들의 처지와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9.24 기후정의행진에서도 그 비슷한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집회의 대표 구호인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바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구호를 차용한 것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기후 위기 피해 당사자들의 연단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큰 박수로 호응했다.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자 정부의 기후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 급진적 구호들이 많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대응 정책의 희생자이기도 한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발언도 공감을 얻었다.

“석탄발전소가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뒤 ... 그 안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석탄화력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 대책 하나 없이 폐쇄하려는 정부가 이제 와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해도 이미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은 기후 위기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를 오히려 키웠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 위기 따위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태도를 초지일관 유지했다.

외교 문제가 될까 봐 전임 정부가 유엔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그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은 멀찌감치 미뤄졌다.

위험천만한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고 노후한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삼척에 새로 짓고 있는 초대형 석탄발전소는 마저 완공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폭 늘리는 계획도 발표했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려 애쓰고 있다.

기후 재난의 시대에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업 이윤을 위해 긴축

과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정서가 폭넓게 있다.

이 점에서 이날 처음으로 노동자 수천 명이 기후정의 집회에 참가한 것은 의의가 있었다. 특히, 기후 위기의 피해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았다.

노동자

기후 위기의 주된 피해자이자 윤석열 정부에 맞설 힘을 가진 사회 세력이 이 운동에 함께하는 것은 기후정의 운동이 중요한 참가자를 새로 구할 가능성을 보여 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후 재난과 불평등, 양극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해 많은 청년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 사회운동들도 함께했다.

임신중지권 운동, 성소수자운동, 교육운동, 빈민운동, 복지운동, 평화운동 단체들이 부스를 차리고 기후 위기 대응과 각자의 고유한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의 당원들이 많이 참가했고,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도 COP27(27차 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 보이콧을 주장하며 참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러저러한 기후·환경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청년들이 많이 참가했다는 점이다.

‘체제 변화’라는 급진적 구호에 지지를 나타내는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구호는 2019년 전 세계에서 분출한 급진적 기후 운동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의 하나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대규모 자연 파괴와 생태 학살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 ... 문제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는 혁명이 필요하다” 하고 발언했는데, 꽤 많은 청년들이 박수를 보냈다.

9.24 집회는 기후 운동이 큰 힘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줬다. 동시에 이 운동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고자 하는 다른 사회운동들에도 자신감을 주고 돌파와 전진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했다.

본지는 이 운동의 전진을 반기며 기후정의 운동이 더 급진적이면서도 좌파적인 대중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일조를 하려 노력할 것이다.

장호중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올해 8월 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2퍼센트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도 18.4퍼센트 올랐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전기·가스 요금을 애초 예고한 것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정부는 10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4.9원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9.9원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해에 킬로와트시당 5원까지 올릴 수 있는 연료비조정단가 상한선을 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평균 전기 요금은 올 한 해에만 월 7000원씩 오르게 된다.

가스 요금도 4, 5, 7월에 이어 10월에 또 오를 예정인데, 정부는 애초 예고한 것보다 인상 폭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올해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해 적자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만회하려면 4인 가구 한 달 기준으로 8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가스공사도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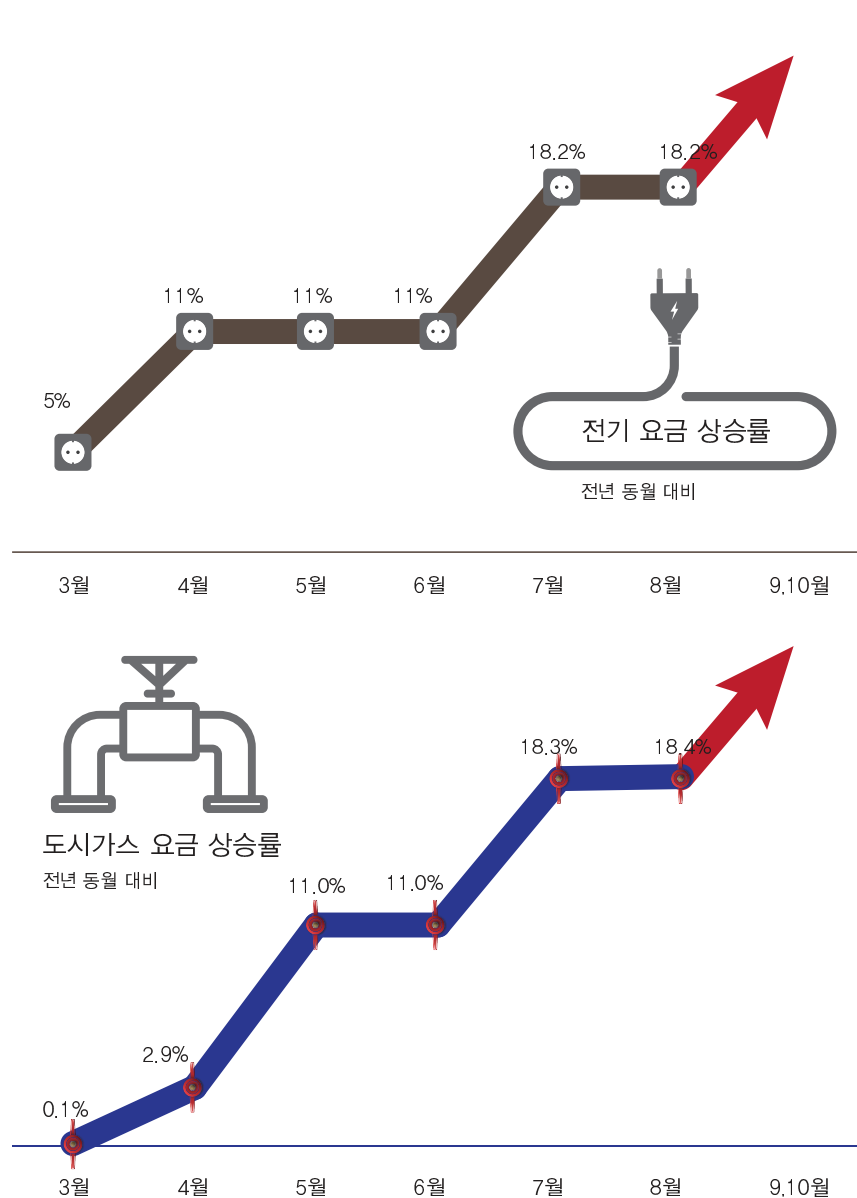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에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며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불안정성도 크다. 게다가 환율 급등은 에너지 수입 가격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환율 급등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책임

반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과 민간 발전 기업들은 상당한 이익을 봤다.

SK이노베이션, 에스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2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분기에 수도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민간 발전사들도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SK E&S, GS EPS, GS파워와 같은 민간 발전사들은 영업이익률이 17~30퍼센트에 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이 이들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은 천연가스 가격에 비례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싸게 구입해 둔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발전 공기업들은 이렇게 얻은 추가적 수익을 한전과 나눠 갖지만, 민간 기업들은 이윤을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챙긴다. 한전의 적자가 커진 데는 이처럼

전기 생산 분야에서 민영화를 확대해 온 영향도 있는 것이다. 현재 전기 생산 부문의 30퍼센트가량을 민간 기업들이 담당할 정도로 민영화는 확대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 생산 부문을 넘어서 판매 부문에서도 민영화를 확대하려 한다.

게다가 한전은 지금까지 기업들에게 막대한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줬다. 2015~2019년 5년간 전력 소비 상위 50대 기업에게 한전이 준 요금 감면 혜택은 10조 원이 넘는다.(민주당 김성환 의원, 2020)

따라서 한전 적자의 책임은 이제까지 혜택을 본 기업들이 져야 한다. 기업들에게 주는 특혜를 없애고, 에너지가격 폭등 속에 폭리를 취한 기업들을 규제하고 그들의 이윤에 세금을 매겨 노동자·서민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도입

해 민간 발전사들에게 주는 비용을 줄이려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 속에 금세 정책 추진을 포기했다. 또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 에너지 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고 언급했지만,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곧 발표할 10월 전기 요금 인상안에서 정부는 산업용 전기 요금도 일부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경제 상황을 볼 때 이런 발표는 그저 보통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반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내년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은 492억 원(15퍼센트) 줄어들었다.

이런 정책 속에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생활고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앞친 데 뒤편 격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부담은 커진다. 2020년에 전기료를 체납한 가구가 80만 곳에 이르고, 지난 5년간 35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못 내 단전을 경험했다.

한편, 좌파 일각에서도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부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옥죄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는데도 좌파 진영에서 반대 목소리를 듣기 힘든 데는 이런 혼란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을 올린다고 노동자·서민의 전기 사용이 쉽게 줄이기 힘들다. 낭비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 고통 전가로 생계비 위기만 깊어질 뿐이다. 탈탄소 전환을 위한 부담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탄소 배출로 큰 이익을 거둬 온 기업들이 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노동자·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에 맞선 저항들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에 맞서 대중적 저항이 성장해야 한다.

정선영

이란

경찰의 젊은 여성 살해에 항의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다

닉 클라크

이란에서 젊은 여성을 살해한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가 6일째(9월 22일 현재)에 접어들었고, 여러 도시에서 시위대는 경찰서에 불을 질렀다. 주로 북서쪽 쿠르드족 지역과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려고 시도하면서 최소 7명이 사망했다.

이 시위는 2019년부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란 정부에 맞선 여러 아래로부터의 저항 중 최신의 것이다. 이 시위는 경찰이 마흐사 아미니를 살해한 다음 날인 토요일에 시작됐다.

마흐사는 지난주 화요일 이란의 종교 법을 집행하는 “지도 순찰대”에 체포된 후 구금 시설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마흐사는 3일 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히잡(머리 스카프)으로 머리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혐의로 마흐사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경찰관들이 그녀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리고 차량에 세게 쳤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마흐사가 심부전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흐사의 가족은 그녀가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마흐사의 사망 직후 시위대는 “여성, 삶, 자유”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시위대 중 많은 여성이 이란의 법에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머리 스카프를 벗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나 이란 출신 학자이자 활동가인 페이먼 자파리는 〈소셜리스트 워커〉와의 인터뷰에서 시위는 머리 스카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강제 착용이라는 잔혹함에 대한 반대라고 말한다. 자파리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과 청년이 최전선에 있지만 시위대의 구성은 정말 다양하고, 전 세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일상과 사회생활에 국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반종교적이거나 히잡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시위는 히잡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을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한 여성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히잡을 쓰지만 딸을 응원합니다. 여성



히잡 강제 착용과 정부에 항의하는 이란의 대학생들

시위대 중 상당수는 히잡을 쓴 어머니, 할머니, 친척,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교적이나 무종교적이라는 구분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시위는 원하는 대로 입을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위는 이란 정부들이 과거부터 겪어 온 오랜 위기와 저항의 물결 속에서 분출했다. 이란은 경제 위기를 겪어 왔는데, 이 위기는 서방의 제재 그리고 경제를 민영화와 시장에 개방하는 개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결과 시위와 파업이 반복적으로 폭발했다. 주로 빈곤, 실업, 물자 부족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이는 2019년 초 일

련의 대규모 시위로 시작됐고, 당시 경찰과 군대는 최대 1,500명을 살해했다.

더 최근에는 정부의 기초 식료품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들이 올해 초 있었다. 이와 더불어 도시 노동계급의 성장,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대학 진학 증가가 사회적 반란이 일어날 조건을 만들어 냈다.

청년들의 반란에 대응해 에브라힘 라이시 정부는 종교법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이는 정부와 더 많은 자유를 원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반목을 심화시킬 뿐이며, 높은 실업률과 빈곤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잠식

할 것이다.

서방 언론의 보도는 일부 시위에서 촬영된 “독재 타도” 구호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란을 미국의 중동 지배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보는 서방 정부들은 종종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에 달려든다.

그러나 페이먼은 시위대가 “최고 지도자든 사든 압제자를 타도하라”는 구호도 외쳤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현 정권과 서방의 지원을 받다 1979년 혁명으로 전복된 독재정권[샤] 모두를 가리킨다.

오히려 페이먼은 시위의 주요 슬로건인 “여성, 삶, 자유”가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체제에 대한 광범한 반란과 연결 짓는다고 말한다.

“여성, 삶, 자유는 성차별 문제를 최전선에 둡니다.

“삶이란 모든 사람이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빈곤층과 노동자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국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페이먼은 “체제 전체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청년층의 정서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패와 부실한 경제 운영, 그리고 정치적·사회적 자유에 대한 제약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3호 / 번역 박이랑



이란 수도 테헤란까지 번진 반정부 시위

중국 혁명(1925~27년)과 트로츠키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이 기사는 9월 2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회는 시리즈 토론회인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두 번째 시간'이었다.



토론회 영상 보기

이 글에서는 트로츠키가 1925~27년 중국 혁명에 관해 뭐라고 주장했는지, 그것이 후대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트로츠키는 중국 혁명 당시 코민테른을 지도한 스탈린이나 부하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이었다. 핵심 쟁점은 중국 혁명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떤 세력이 이끌어야 하는가, 그에 비춰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였다. 이 차이는 중국 혁명의 결정적 국면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채택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차이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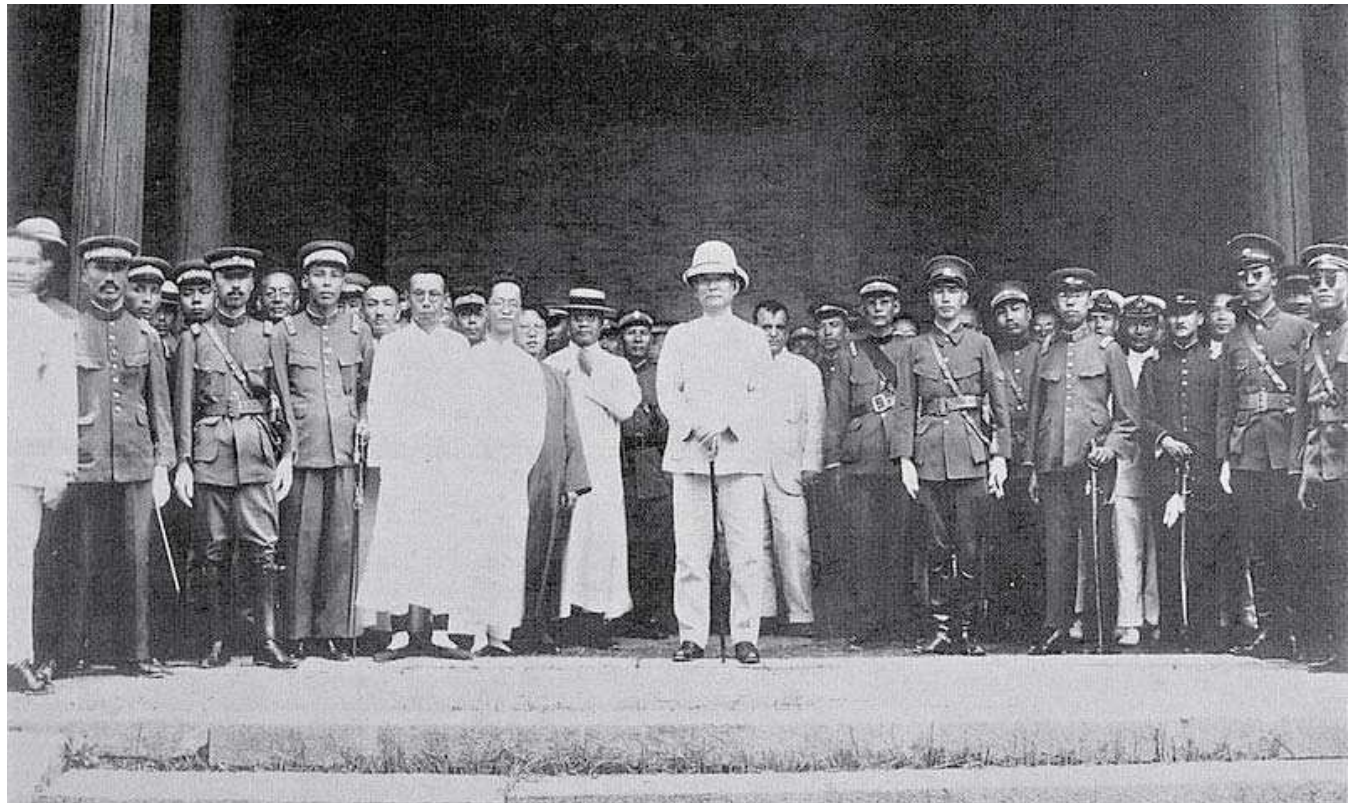
코민테른과 1차 국공합작

중국 혁명은 신생 노동자 국가였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러시아의 혁명이 빅토르 세르주는 “중국 혁명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소비에트 세계 전체를 들어올리는 듯한 긍정적인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고 말했다.

당시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코민테른과 소련공산당은 중국공산당이 창당할 때부터 적극 관여했다. 1920년대 초반에 코민테른은 그레고리 보이틴스키와 헨드리쿠스 마링(네덜란드인으로 본명은 스니블릿)을 중국에 보내 중국공산당의 창당과 활동을 도왔다.

마링은 1921년 중국에 와서 홍콩의 선원 노동자 파업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고, 그 투쟁 지도부가 국민당 지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마링은 1921년 12월에 국민당 지도자 쑨원을 만나 국공합작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

그 뒤 마링은 코민테른의 식민지문제 위원회에 ‘국공합작’ 정책을 제안했다. 마링은 “국민당은 노동자 계급과 연계를 가지고 선원 파업을 지도했고, 많은 선원들이 국민당에 가입했다”며, “국민당은 노동자 정당”이기에 “공산당원들은 국민당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코민테른 지도부



1924년 황포군관학교 입학식. 가운데 인물이 국민당 지도자 쑨원(1866~1925), 그 오른쪽에 군복 입고 차렷한 이가 장제스다

는 이 보고에 기초해 국공합작 정책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링은 1922년 8월 중국공산당 2차 당대회에서 코민테른의 권위를 이용하고서야 가까스로 국공합작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당시 천두슈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국공합작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1923년 3월 소련을 대표한 아돌프 요페와 국민당 지도자 쑨원의 공동선언이 발표되며 1차 국공합작이 공식 시작됐다. 그 내용은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개인 자격으로 입당하고 국민당의 당규를 따른다는 것이었다. 소련은 국민당을 위해 황포군관학교를 지어 주고 재정 지원을 해 주고 군사 고문을 파견했다.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이 독립적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한다는 것과 모순이었고, 그 뒤 실천을 보면 이 결의안은 공문구였다.

당시 트로츠키는 소련공산당 정치국 안에서 홀로 국공합작에 반대했다. 나중에 트로츠키 자신이 동료인 맥스 삭트먼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트로츠키는 중국공산당 지도자 천두슈가 처음부터 국민당 입당에 반대했고 그 뒤 결정적 시기마다 국민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코민테른에 호소했음을 알지 못했다. 스탈린과 부하린이 그 사실을 비밀에 부쳤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을 국민당에 예속시킨 스탈린과 부하린

당시 역사를 돌이켜 보면, 노동자 투쟁이 절정을 향해 가던 1925년 5·30 운동 이후에는 중국공산당이 국공합작을 중단하고 국민당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활동해야 했다. 당시 홍콩에서 소비에트라고 할 만한 기구가 등장하고 이 중권력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놓쳤더라도 중국공산당은 장제스가 쿠데타를 시도한 1926년 3월 중산함 사건 뒤에는 반드시 국민당에서 나와야 했다. 이 사건은 장제스와 국민당이 대표한 중국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와 중국 노동자·농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과 함께, 장제스가 노

동자 투쟁을 짓밟기 위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탈린과 부하린은 중국공산당이 계속 국공합작에 매여 있도록 했다. 심지어 중산함 사건 직전에 코민테른은 국민당을 준회원으로, 장제스를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트로츠키는 소련공산당 정치국 내에서 이 결정에 반대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트로츠키는 장제스가 중국 노동운동을 꺾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장제스는 사형집행인의 역할을 맡기 전에 세계 공산주의의 보호막이 필요했고, 마침내 그것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고 지적했다.



스탈린(좌, 1878~1953)과 부하린(우, 1888~1938)

스탈린과 부하린은 중국이 제국주의에 의해 민족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급을 뛰어넘어 민족적 단결을 이뤄야 하고 중국공산당이 그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일어날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일 것이기에 자본가와 국민당이 이 혁명을 지도해야 하고,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의 단결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탈린과 부하린은 자신들이 레닌의 1905년 입장을 계승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멘셰비키의 입장이었다. 멘셰비키는 러시아 혁명을 부르주아지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추구했다.

반면, 1905년에 레닌은 러시아에서 일어날 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기는 했지만,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노동계급이 혁명을 이끌어야만 하고, 그러면 부르주아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의 비판

트로츠키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중국에서는 계급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스탈린과 부하린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제국주의의 압력은 중국 내의 계급투쟁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 첨예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국주의에 맞선 혁명적 투쟁은 계급들 사이의 정치적 차이를 ... 오히려 강화시킨다. 제국주의는 중국 내 사회관계들에 매우 강력한 힘을 미친다. 그 힘의 주요 원천은 ... 외국 자본과 토박이 부르주아의 경제적·정치적 유대이다. ... 차별당하고 착취당하는 대중이 자기 발로 서려 할 때마다 민족 부르주아는 제국주의자들의 품에 안기고야 말 것이다.”

1920년대 중국 자본가들은 강대국들과 무역을 하며 성장한 상인들이었고, 지주 계급 출신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주들과 끈끈한 관계였다. 트로츠키는 농민을 지도하는 노동자 계급이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자본가들을 분쇄할 때에만 반제국주의 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의 주장은 비극적으로 입증됐다.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1927년 3월 상하이에서 일어난 노동자 혁명을 분쇄한 것이다. 국민당은 대중운동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나서 파괴한 것이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코



1925년 5·30 운동으로 노동자 투쟁이 크게 고조됐지만, 중국공산당은 국공합작에 계속 매여 있었다

민테르 덕분에, 급성장하는 중국공산당을 국민당에 예측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자들은 국민당에 저항하지 못하게 손발이 묶인 셈이었다.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에 트로츠키는 장제스의 쿠데타를 경고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공산당 정치국에 제안서를 보내 중국에서 봉기한 노동자와 농민이 소비에트를 조직한다면 장제스의 쿠데타로부터 혁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얼마 뒤 트로츠키의 경고대로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중국공산당원들과 노동자들을 대량 학살했다. 그런데도 스탈린과 부하린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은 이번에는 중국공산당에게 국민당 좌파인 왕징웨이를 지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책도 3개월 뒤인 1927년 7월 왕징웨이의 배신으로 또다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

1926년 광저우, 1927년 상하이와 우한에서 겪은 세 번의 패배로 중국 혁명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트로츠키는 혁명 세력이 장제스의 독재와 무능을 폭로하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 쟁점을 내걸고 지지 세력을 넓혀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탈린과 부하린은 자신들의 오류로 인한 패배를 은폐하려고 중국공산당에 준비되지 않은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했다. 그 결과 봉기는 패배했고 혁명의 힘은 완전히 소진됐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마르크스주의 관점

노동자연대 TV

중국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이 며칠이 멀다 하고 벌어집니다. 홍콩 항쟁, 마중 무역전쟁, 위구르인 탄압, 중국 학생 시위, 그리고 최근 대만해협 위기까지. 10월 중하순에는 시진핑 3연임이 예고되고 있죠.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인가요? 노동자연대TV는 이런 분들을 위해 현대 중국의 역사적 사건과 쟁점, 그리고 중국 사회 성격을 살펴보는 시리즈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세계가 격동에 접어든 지금,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갖고 싶다면, 지금 시리즈 토론회를 신청하세요.

발제자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문가

#	토론회 주제	일정/링크
01	알고 있나요?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 ▶ 지금 시청 가능	youtu.be/nj3F4cPdJ2Y
02	중국 혁명(1925~27년)과 트로츠키 ▶ 지금 시청 가능	youtu.be/KYARu-A5uLs
03	1949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 지금 시청 가능	youtu.be/nAPnKsYKBg8
04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 - 신화와 진실	10월 18일
05	중국의 소수민족(티베트, 위구르)과 저항	10월 25일
06	덩샤오핑과 개혁·개방	11월 22일
07	텐안먼 항쟁과 그 후	11월 29일
08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추후 공지
09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추후 공지
10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추후 공지
11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추후 공지
12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역사	추후 공지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bit.ly/on-china>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노동자연대TV에 오시면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스탈린과 부하린이 왜 중국공산당을 국민당에 예측시키고 중국 혁명을 재앙으로 이끌었는지를 알려면, 1920년대 초반 국제 혁명 운동과 소련 내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봐야 한다. 1923년 독일혁명의 패배는 러시아 혁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엄청난 경제적·군사적 압력이 소련에 가해졌고, 소련 관료들은 ‘헛되이’ 국제 혁명을 추구하기보다 ‘일국사회주의’를 방어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24년 무렵 코민테른은 국제 혁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소련을 방위하는 외교정책에 종속돼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도구로 변질됐다. 당시 소련 지도자들이 작고 미약한 영국공산당보다는 영국노동(TUC)이 소련 방어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실세라고 여기며 ‘영·소 위원회’를 만든 것이나, 중국공산당을 국민당에 예측시키고 국민당의 환심을 사려 했던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소련 관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스탈린과 부하린은 중국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성공한다면 트로츠키의 좌익반대파를 제압하고 당내 주도권을 쥌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재앙적인 정책으로 노동계급 기반을 완전히 잃은 뒤에 중국공산당이 택한 노선이 바로 마오쩌둥주의였다. 마오쩌둥은 생산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게릴라를 이끌고 중국 서북부 지역인 옌안에 등지를 틀고 있다가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도시를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그러나 1949년 혁명으로 수립된 것은 노동자 권력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

중국 혁명과 연속혁명론

트로츠키는 중국 혁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 혁명을 평가하는 많은 글을 써 후대 사회주의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1927년 상하이 노동자 무장 봉기 직전까지는 트로츠키는 중국에 대한 글을 별로 쓰지 않았다. 하나는 1925년 5·30 운동을 다룬 짤막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공산당 정치국에 제출한 보고서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 당의 문제들”이라는 글이다. 마지막으로 1926년 9월에 라데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글에서야 비로소 중국 혁명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트로츠키(1879~1940)는 중국 혁명을 평가하며 후대 혁명가들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중국공산당 창당부터 노동자 혁명이 패 전개된 시기까지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트로츠키가 내전 기간에 전쟁 담당 장관으로서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백군과 싸우느라 바빴던 것이 한 이유일 것이다. 또, 중국 상황에 관한 정보 제한 같은 스탈린의 방해도 있었다.

그러나 트로츠키 자신의 문제도 있었다. 그는 1924년 말부터 1926년 6월까지 정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또, 트로츠키가 좌익반대파를 이끌며 부하린-스탈린과 맞설 때, 또 지노비예프-카메네프와 제휴해 통합반대파를 만들었을 때, 자기 진영 인물들에 타협을 많이 한 것도 공백의 또 다른 이유였다.

예를 들어, 국공합작을 처음 추진한 마링, 쑨원과 함께 국공합작을 선포한 아돌프 요페는 좌익반대파 성원이었다. 또 다른 좌익반대파 성원인 카를 라데크는 1922년 코민테른 4차 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지도자 천두슈가 국민당 입당에 반대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1927년 3월까지도 이 입장을 고수했다. 지노비예프는 1926년 5월까지 코민테른 의장을 지내면서 중국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약 속에서도 트로츠키는 중국 혁명의 고비마다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공산당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1926년 9월 이후에 트로츠키의 분석대로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또 1927년 4월 장제스의 쿠데타 이후에라도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좌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쟁을 조직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다.

중국 혁명이 참혹하게 패배하고 그것이 세계 혁명 운동에 미친 악영향을 생

각하면, 트로츠키의 제안이 현실에 적용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럼에도 트로츠키가 중국 혁명을 평가하며 남긴 글들은 중국 혁명가들에게 영향을 미쳐 1930년대 초반 중국에서 트로츠키주의 조직을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트로츠키는 중국 혁명을 평가하며 연속혁명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후대의 혁명가들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남겨 줬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진국의 부르주아지는 봉건제와 제국주의에 맞서 민주적·혁명적 해결책을 일관되게 제공할 수 없다. 둘째, 그 혁명을 이끌 결정적인 구실은 인구에서 소수일지라도 노동자 계급의 몫이다. 셋째, 농민은 독자적 권력을 세울 수 없고 결국 노동자 계급의 지도를 따를 것이다. 넷째,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민주주의 혁명은 즉시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전화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주의 혁명은 한 나라에서 시작할지라도 전 세계 차원에서 완수될 것이다.

트로츠키는 연속혁명 이론의 관점에서 중국 혁명을 분석한 중요한 글들도 여럿 남겼다. 《레닌 이후의 제3인터내셔널》 3장에 실린 “중국 혁명의 개괄과 전망”이 그중 하나다.

그런데 1949년에 일어난 중국 혁명은 트로츠키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듯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민족해방혁명을 이끌기는커녕 주변적 구실만 했다. 그러나 1949년 중국 혁명은 공산당이 이끌었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고, 이 혁명을 통해 수립된 것은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

중국 혁명을 거치면서 트로츠키가 일반화한 연속혁명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크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자 한다. 먼저, 선진국뿐 아니라 후진국에서도 노동자 계급이 사회 변혁을 이룰 유일한 집단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자동적이지 않다. 노동자들이 혁명적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국제주의이다. 자본주의는 국제적 체제이므로 일국의 발전과 투쟁을 세계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고, 어떤 혁명이든 살아남으려면 세계로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트로츠키의 유산을 적용하는 몫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추천 책



중국 혁명의 비극

해럴드 로버트 아이작 지음,
정원섭·김명환 옮김,
688쪽, 숨쉬는책공장(절판)



레닌 이후의 제3 인터내셔널 —3장 ‘중국혁명의 개괄과 전망’

레온 트로츠키 지음, 정민규 옮김,
425쪽, 풀무질(절판)

※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다.

정의당 재창당은 좌클릭이지만 모호하다

정의당이 차기 대표 선거에 돌입했다. 향후 노선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듯하다.

특히, 최근의 복합 위기 심화로 대중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지배계급의 고통 전가 추진 의지도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위기 탈출에 대한 정의당의 절실히 반영된 듯하다.

대표 선거를 앞두고 9월 17일 당대회에서 재창당을 결의했다. 모호하지만 기존 노선에서 좌클릭하는 방향이다. 창당 시 노선인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전략을 (일시?) 포기하고, 노동 중심성을 복원하며, 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는 “미조직노동을 향한 조직노동의 ‘나눔과 양보’를 ‘미조직노동을 향한 조직노동의 ‘적극적 연대’로 문구 수정했다.

정의당이 대우조선 등의 투쟁 현장에 출현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됐다. 9·24 기후정의행진에도 당원들을 가능한 최대 동원해 참가했다.

재창당에 걸맞은 새로운 세력의 합류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대신 정의당 창당 주역의 하나인 참여계 천호선 전 대표가 탈당했다. 그래도 당대표 선거 후보군에는 좌선회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여럿 출마했다.

모호함

최근 <레디앙>이 정의당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해 정의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8월 조사에 관해 보도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노선/정체성이 정의당 비호감 최대 원인 ... 모호한 정체성, 민주당 2중대, 기존 정치세력과의 차별성 등 전체적으로 노선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많았다.”

정의당 당원 대상 조사에서도, “정의당의 호감도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념 및 정체성의 불분명함(29.0%)’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체성 논란은 결국 정의당 노선의 온건함과 노동 중심성 결여에 관한 것이다.

좌파 정치에서 노동이 중심적 정체성이 돼야 하는 이유는 통상 이렇다.

첫째, 노동과 자본의 계급 구분은 계급 이해관계의 화해 불가능성 때문에 객관적인 좌-우의 지표가 된다. 둘째, 노동계급은 인구의 큰 다수(한국의 경우 70~75퍼센트)이므로 노동계급의 필요야말로 국가적·국민적 의제이고,



대중 투쟁이 강조돼야 한다. 한편, 정의당 투표층에서 정의당이 추구할 이념에 사회민주주의의 다음으로 사회주의가 꼽혔다

노동계급 지향적 좌파는 이 문제들에서 인구의 다수를 대변한다. 셋째, 크고 작은 계급투쟁 속에서 단련된 노동자들은 일상적 시기에 개혁 쟁취 운동의 동력 구실을 한다. 넷째, 노동계급은 기업주들의 이윤에 타격을 가해 양보를 얻어낼 능력이 있다.

정의당은 노동자 당원도 많고, 노동자들이 내는 정치자금 비중도 높았다. 선거마다 민주노총의 공식 지지를 받았고, 노동자 밀집 지구에서의 득표도 높았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지지를 많이 잃었다.

그러므로 정의당의 정체성 위기는 스스로 강점을 약화시킨 결과다. 정의당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정의당은 정치투쟁/경제투쟁 분업이 핵심 특징인 사회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한다. 경제투쟁은 노조 지도층이 알아서 맡고, 의원단은 주류 정당 의원들처럼 표를 많이 받고 국회 안에서 입법 협상을 잘 하면 된다는 식이다.

정의당 전체가 이런 선거주의·의회주의 실천으로 기울면서 의원단과 선거공학이 더 우대받는 정치 문화가 조성됐다. 기층 당원들은 방치되고, 수동성이 조장됐다.

노동자들이 해고나 손배가압류 위협을 감수하고서, 뺨벌에서 또는 눈비 맞으며 벌인 집회·점거·농성에 눈도장과 인증샷을 넣어 정의당 의원들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다. 당원들을 동원해 지지와 연대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특히 없었다.

노동자들에게 한결같이 내 편인 정당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 운

동의 유기적 일부가 되기를 회피한 것이다. 권영길·천영세 전 민주노동당 대표들도 최근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운동의 유기적 일부

정의당 정치인들은 공식 정치에서의 세력 열세를 기층의 투쟁과 결합해 메우려 하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제 개혁 거래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봤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조 지도부들은 경제투쟁들을 만만찮게 연결시켜 대정부 투쟁화하기를 꺼리고 이음매 없는 개별 투쟁으로 머물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정의당의 (민주당과의 개혁 공조 노선만이 아니라) 정·경 분업 실천도 이런 경향에 일조했다.

계급투쟁이 정치화되지 못하면, 노동계급 대중의 정치의식도 일반적으로 고양되기가 어렵다. 재작년과 올해 선거들에서 좌파 전체의 존재감이 약했던 주원인이다.

그런데 <레디앙> 보도를 보면, 정의당 투표층은 “현재 정의당이 집중하는 이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페미니즘’(23.9퍼센트) 답변이 가장 많았고, 동시에 가장 불필요한 이념으로도 페미니즘(30.6%)을 꼽았다.” 페미니즘이 과대 대표돼 정의당(정체성)에 해를 끼쳤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정의당이 (권영길·천영세 두 전 의원의 고언대로) “적극적으로 노동을 중심 사업으로 삼고” 여기에 여성 차별 문제들을 결합시켰다면 적어도 “노동이냐, 젠더냐” 하는 부적절한 대립과 혼란은 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남녀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여성 노동계급의 중요 현안인 저임금 해결, 정규직화, 고용 안정, 임신중지권 등을 위한 투쟁에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불편한 용기, 비웨이브 같은 전투적인 노동계급 여성 청년들의 운동과도 거리를 둔 정의당 페미니즘은 그러나 (권·천 두 의원의 지적처럼) 미투 지지를 배타적으로 강조했다.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진실을 따져 보지도 않고 박원순 조문 행위 일체를 2차가해라고 주장한 것은 우파에게 이용만 됐다.

정의당이 노동자 투쟁의 유기적 일부가 돼 노동계급과 더 밀착했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과 분노를 더 빨리 감지하고, 노선의 좌선회 압력도 진작 받았을 것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연립정부 노선의 중단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새로 강조한 사회민주주의적인 노동정치도 정경 분업 실천과 사회연대전략 때문에 약점이 분명하다. 사실 연금 개혁, 금리·전기요금 인상 같은 중요한 쟁점들에서 정의당은 아직도 확고하게 노동계급의 편을 들지 않고 있다.

노동자 투쟁과 결합해야 하고, 특히 우파 정부의 각종 개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그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강조돼야 한다. 바넘 나, 별 것 아닌 문제를 놓고도 주류 양당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의회 협치’를 중재하려는 방식은 진보적일 게 없다.

김문성

칠레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의 의미와 교훈

지난해 말 좌파 정치인 가브리엘 보리치가 칠레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에서도 적잖은 좌파들이 그에게 주목했다. 그런데 그 보리치가 내놓은 개헌안이 9월 4일 국민투표에서 61.9퍼센트 대 38.1퍼센트라는 큰 표차로 부결돼 버렸다.

보리치는 2019년 칠레에서 분출했던 강력한 대중 운동의 여파 속에서 집권했다. 그 운동은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에 항의해 급진적이고 전투적으로 벌어졌다(관련 기사 304호 '칠레의 노(老) 혁명가가 말한다: 칠레 항쟁의 잠재력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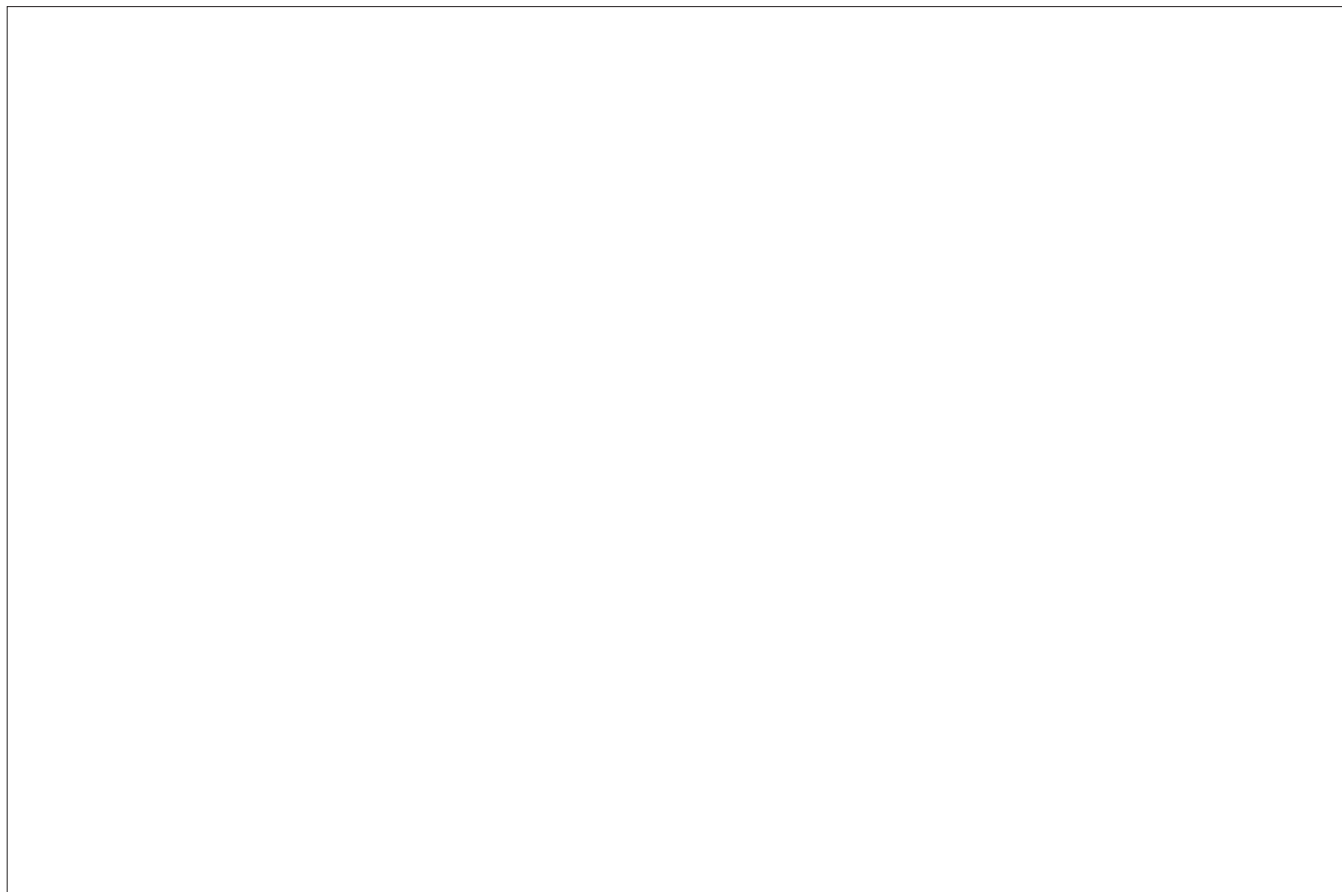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시위로 촉발된 항의가 교육, 보건, 빈부격차 등으로 순식간에 쟁점이 번져 신자유주의 전반에 도전을 제기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자 당시 칠레 정부는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기만적인 양보안으로 운동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당시에 좌파들은 투쟁을 방기하고 정부가 제시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이고 개헌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후 칠레는 헌법 개정 여부부터 국민투표로 묻는 지루한 과정에 접어들었다.

물론, 수많은 칠레인들은 1970년대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하에서 제정된 현행 헌법을 증오했다. 그러나 대중 운동의 성장과 급진화를 중심에 놓지 않는 엘리트주의적 개헌 과정은 대중을 이반케 하는 구실을 했다. 보리치는 2010년대 초 교육 민영화 반대 운동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2019년 항쟁에서 다른 좌파들과 함께 저항을 합법적 절차로 수렴시키는데 일조했다.

동시에, 보리치는 저항의 정치적 수혜자가 돼, 지난해 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칠레 대중은 보리치의 상대 후보이자 피노체트의 계승자를 자처한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의 당선을 저지하려고 보리치에게 투표했다.

보리치가 내놓은 개헌안은 물론 진보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노체트 독재 정부가 저지른 인권 유린 범죄의 공소시효 조항 삭제, 전국민 단일건강보험 제정,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초보적 수준의 노동자 권리와 토착 원주민 권리 보장 등.

하지만 동시에 피노체트 정부하에서 틀이 잡히고 우파와 사회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거듭 개악된 연금 제도를 보존하는 내용도 있었다.



개헌 부결 후에도 계속 싸우는 칠레 학생들 2019년 거대한 민중 운동이 지루한 개헌 협상에 자리를 내준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런 개헌안의 한계도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줬다.

투표율은 매우 높았다. 투표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선 때는 투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투표한 사람 중 96퍼센트가 개헌안에 반대 투표했다. 개헌안 찬성표(480만)는 개헌 여부를 묻는 2021년 국민투표 당시 개헌 찬성표(580만)보다 적었다.

대기업과 우익(극우 포함)의 맹렬한 반대 캠페인도 일정한 구실을 했다. 칠레 핵심 산업인 광업 자본가들을 비롯한 대자본가들은 토지에 대한 토착 원주민들의 권리가 조금치라도 확대되고 환경 규제가 약간이라도 강화되면 자신

들이 비용을 치르게 될까 우려했다.

그러나 개헌안이 좌초한 더 중요한 이유는 보리치 정부 자신이 변화 염원 대중 속에서 자아낸 실망이다.

생계비 위기

보리치 당선 후에도 칠레 대중의 고통은 계속 심각해졌다. 식품·생필품 가격이 1년 전에 견줘 20.6퍼센트 올랐다(7월 기준). 이 때문에 빈곤율이 치솟았다. 인종차별과 천대에 시달려 온 토착 원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위기 속에 등장한 좌파 정부는 칠레 자본주의를 책임지고 노동계급을 공격하기를 (부자들과 기성 국가 관료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런데 보리치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 개혁을 추구한다는 노선을 취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보리치의 내각에는 사회당 정부 때 민영화와 복지 공격을 추진했던 사회당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보리치 정부는 대중의 고통을 키울 일들을 자행했다. 칠레 기준금리는 1년 새 아홉 차례에 걸쳐 자그마치 9퍼센트 포인트나 올랐는데, 그중 다섯 번은 보리치 정부하에서 올랐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극심해졌다.

또한 보리치가 약속했던 생계비 보조금 지급은 시능 수준을 넘지 못했다. 연금 개혁 약속은 이미 이번 개헌안에서

사실상 뒤집어 버렸다.

보리치 정부에 대한 칠레 대중의 기대는 매우 빠르게 식었다. 보리치 정부 지지율은 취임 얼마 후부터 30퍼센트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칠레 우익(극우 포함)은 보리치 정부에 대한 실망을 개헌안 반대로 모아낼 수 있었고, 그로써 대선 패배의 타격을 상당 정도 만회했다.

개헌안 부결 후 보리치는 새로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 패배를 거친 후 나올 새 안은 이전보다 덜 진보적일 것이다. 개헌안 부결 후 보리치가 추진 중인 소폭 개각에서도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요컨대, 개헌안 부결은 보리치가 2019년 칠레 노동계급 대중이 표출한 염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보리치는 우파 야당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타협(의회 협치)이라는 이름으로 갈수록 큰 후퇴 압력을 받을 것이다.

좌파 정부가 등장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저항과 변화 염원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전혀 아님을 보여 주는 사례다.

아래로부터의 급진적인 저항이 건설돼야 하고, 혁명가들이 거기서 정치적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김준호



가브리엘 보리치

사진 출처: Gabriel Boric(레오스)

임금·일자리 공격, 부채 위기로 이어질 파월의 금리 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며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초 0.25퍼센트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치솟았다. 미국 연준은 올 연말에 금리를 4.4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에도 0.5~0.75퍼센트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추락하고 있다. 지난 1년 새 달러 대비 일본 엔과 유럽 유로는 20퍼센트가량, 중국 위안은 13퍼센트, 한국 원은 16퍼센트가량 추락했다.(이번 미국 금리 인상 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신흥국의 환율 상승은 더욱 심하다. 1년 전보다 아르헨티나 페소는 30퍼센트, 튀르키예(터키) 리라는 55퍼센트가량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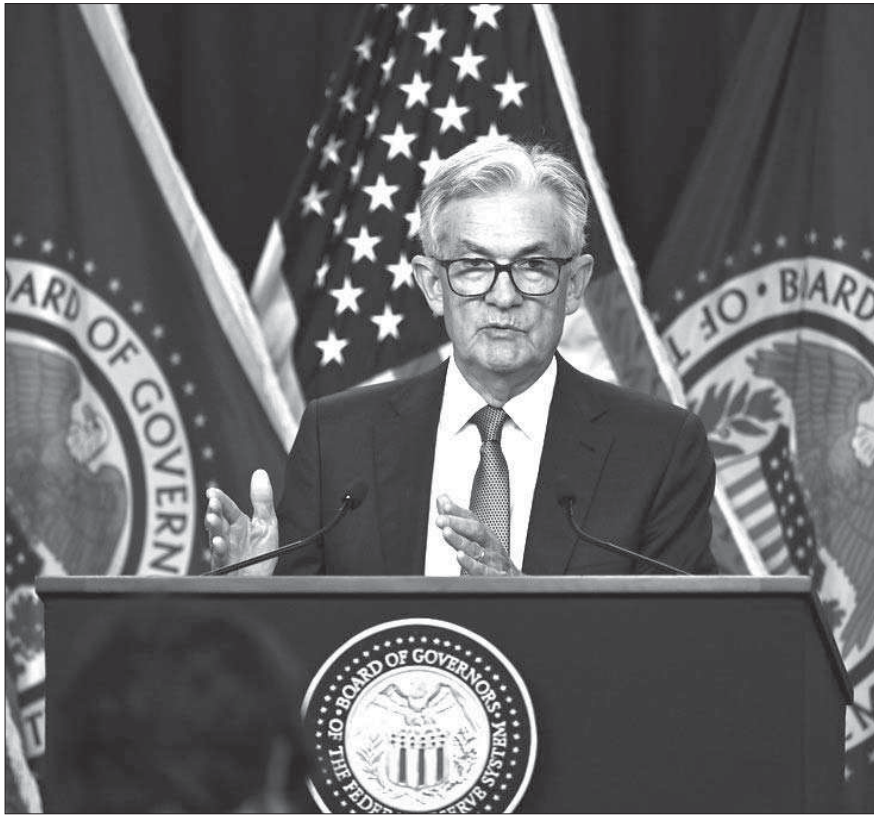
물론 중국과 일본은 침체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여전히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도 금리를 올리기로 했고, 신흥국들은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를 무려 75퍼센트로 올렸다. 브라질도 지난해 2퍼센트였던 금리가 최근에는 13퍼센트에 이른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준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오르면 부채가 있는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한 해에 200만 원 이상 증가한다. 이미 한국의 가구 중 17퍼센트가 적자 가구이고,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급속한 금리 인상으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부채 위기가 터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볼커 충격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은 1979~1987년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금리를 급격히 올렸던 것과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유된다.

1970~1978년 연 평균 물가상승률이 9퍼센트에 달했는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터지자 유가 공급에 차질이 생겨 물가상승률이 15퍼센트로 치솟았다. 1979년 8월에 취임한 볼커는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려 1981년에는 기준금리가 무려 20퍼센트까지 올랐다.

이 금리 인상으로 경제는 침체했고, 수많은 회사가 파산으로 내몰렸다. 실업률은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치솟았고,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기 침체로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노동계급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볼커의 금리 인상은 신자유주의 공격의 신호탄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 1980년 레이건이 집권한 후 볼커의 금리 인상은 더욱 가속화했고, 레이건은 파업 중이던 항공관제사 1만 1000명을 일시에 해고하며 기업주들의 이윤을 뒷받침했다.

볼커의 금리 인상이 주로 금융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일부 자본가들이 피해를 봤지만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이윤 몫을 늘리는 것은 단지 금융 자본가만이 아닌 다수 자본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또 금리 인상으로 달러의 가치를 공

고히 한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노리는 것도 볼커와 비슷하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이번 금리 인상 후에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줄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2퍼센트 목표치 달성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파월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금리 인상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도 노골적으로 말했다. “연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추세 대비 낮은 성장률을 일정 기간 유지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물가 상승 때문에 올해 6월 미국 노동자들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지난해보다 3.6퍼센트 하락했다.(미국 노동통계국)

올해 8월 미국 실업률이 3.7퍼센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도 실업률을 현재보다 0.5퍼센트포인트 혹은 더 큰 폭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구직을 아예 단념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은 62퍼센트로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을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은 냉혹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다.

딜레마

1980년대 볼커 쇼크가 벌어지던 상황과 지금은 차이도 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폭은 당시가 더 컸다. 반면 전 세계 부채 규모는 지금이 훨씬 더 크다.

이 점은 오늘날 권력자들에게 심각한 딜레마이다. 금리 상승이 심각한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볼커가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도 신흥국의 외환 위기는 연쇄적으로 터졌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당시 외환 위기는 이들 나라에 신자유주의 공격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환율 상승 속에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를 보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총액은 올해 1~6월 3790억 달러(509조 원) 줄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달러 부채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경제들도 취약하기 때문에 신흥국의 위기가 선진국으로 파급되며 체제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도 꽤 된다.

이 때문에 지배자들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견이 나온다. 예컨대 세계은행 총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내년에 “파괴적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같은 권력자들 간의 분열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처한 심각한 딜레마를 보여 준다. 또 노동계급의 광범한 저항이 변화를 만들어 낼 여지도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정선영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주소: 서울도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월당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4



파업 기간 가두 행진을 벌이는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들

현대삼호중공업 미조직 하청 노동자 투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임금 인상을 쟁취하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현대삼호중공업의 5개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9월 15일부터 7일간 작업 거부(파업)를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승리했다.

이들은 선박 도장 작업을 하기 전 철판에 묻은 이물질 제거하는 파워그라인더 노동자(파워 노동자)로,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 일당 1만 원 인상과 안전 조치 개선, 연차 휴가 사용 등을 이뤄 냈다. 투쟁 과정에서 금속노조 가입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9월 22일 승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 노동자들은 얼마 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이들과 같은 파워 노동자들이었다.

자신감

파워 노동자가 하는 일은 노동 강도가 높은 조선소 내에서도 가장 힘들다.

노동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배를 진수하기 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칠한 기존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엄청나게 날려 앞이 안 보일 정도다.

또한 매우 위험하다. 산재가 끊이지 않아, 이번 투쟁에서도 안전 조치 개선이 중요한 요구였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조선업 불황기에 임금 많이 삭감돼 왔다. 최근 물가까지 많이 올라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졌다.

최근 선박 수주가 크게 늘어 현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사측이 아무리 노동자 모집 공고를 내도 노동자들이 일하러 오지 않는다. 저임금에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조건을 누가 감수하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수 전 마지막 공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에 들어가자, 회사가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 7일째가 되자, 파워그라인더 작업 공정률이 50퍼센트 정도 떨어지는 등 공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사측은 대우조선 하청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사회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 투쟁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한조선 파워 노동자들은 삼호중공업에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하며 삼호중공업 파워 노동자 투쟁을 응원했다고 한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하청 파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투쟁 기금과 물품을 지원했다고 한다. 지역의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도 연대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추락한 것도 노동자들이 성과를 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노동자 투쟁 승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 단호하게 싸우고 연대를 넓히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철도공사

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 않고 기관사 처벌만 강화

철도공사와 철도사법경찰대(이하 철사경)가 시스템적 결함 때문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과도한 형사 처분을 시도하고 있어 기관사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수색역 구내에서 단행 열차(차량 맨 앞에서 여객차를 끄는 기관차)가 차막이(철길 끝에서 철도 선로가 끝남을 알려 줘, 차량이 선로 구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관차에는 기관사만 있었고, 인명 피해나 열차 지연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 손실도 경미했다.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지부에 따르면, 이번 충돌사고는 차막이가 수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새로운 속도 제어 장치가 기존 장비와 호환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던 것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철도공사와 철사경은 사고가 일어난 조건은 무시한 채, 기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형사 처분을 밀어붙이려 한다.

형사 처분의 근거는 2020년에 개악된 철도안전법 78조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람이 탑승 중인 열차의 탈선·충돌·시설 파괴 등의 업무상 과실이 발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철사경은 기관사 1인도 ‘탑승 중인 사람’(승객)이라며 철도안전법 78조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억지 준항식 꾀어 맞추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기관사 노동자들은 이번 사건이 선례가 돼 개별 노동자에게 ‘묻지 마식’ 책임 전가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과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승용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지부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만 생기면 기관사 개인의 정신 상태가 문제라며 기강을 잡겠다고 난리입니다. 물론 기관사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사고를 줄이려면 기관사만 때려잡을 게 아니라 안전 시스템을 먼저 제대로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월 26일 서울지방철도경찰청 앞에서 사측의 책임 전가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들

이윤 논리에 안전은 뒷전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근무 기강 해이”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기관사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왔다.

기관사 개인의 실수를 적발하겠다고며 운전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징계 수위를 높여 왔다. 이제는 형사 처분도 남발하려 한다.

그러나 철도 사고는 기관사 개인의 업무 과실보다 구조적인 문제(차량과 시설 노후 등으로 말미암은 시스템 결함, 인력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철도사고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66건 중 32건이 기계 결함에서 비롯됐다. 가령, 2018년 강릉KTX 탈선 사고는 선로 전환기 시공

오류가 원인이었다.

기관사의 업무 과실도 단순 부주의보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노동한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지부 부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관사들은 근무 시간이 매우 불규칙해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무엇보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1인 승무와 과도한 업무량 등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만약 1인 승무 기관사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관사만 죽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기관사들은 과도한 처벌 강화는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며 공포감과 위축감을 부추겨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다.

정작 경비를 절감하려고 인력 부족을 방지하고 1인 승무를 늘리며 사고 위험을 키워 온 것은 국토부와 철도공사였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내년 철도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이윤과 수익성 논리를 앞세워 철도 민영화도 추진하려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민영화는 대형 사고의 지름길이었는 데도 말이다.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지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예방책엔 관심 없고, 기관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토부와 철사경, 공사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다.

9월 14일 철사경 건물 앞에서 서울기관차지부를 비롯 운전 조합원 2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해당 기관사의 철사경 조사 출석일인 26일에도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의 승무직 노동자 1만여 명이 항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밝히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색역 사고 관련 기관사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처벌 시도 중단하고, 인력과 안전 시설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철도 승객과 노동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주현, 김지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의 위험한 확전 위협

찰리 김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섭게 심화하는 가운데 9월 21일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라고 위협했다. 또, 최근 러시아군의 패배에 대응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다.

푸틴의 발표 직후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소수의 개인들이 소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에 러시아의 여러 단체들이 저항을 촉구했다. 그중 하나인 반전 운동 단체 '베스나'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푸틴을 위해 죽지 마라.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러시아다. 정부에게 당신은 그저 총알받이일 뿐이고 당신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소모될 것이다.

“‘특수 작전’ 투입을 거부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항복할 것을 각급 부대와 전선의 러시아군에 호소한다.”

반전 단체들은 여러 도시에서 21일 저녁에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연행했다.

모스크바에서는 “우리 아이들 목숨 뺏지 마라”, “푸틴은 러시아에 필요 없다”,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러시아 인권 감시 단체 오베데-인포에 따르면, 21일에 러시아 전역에서 1300명 이상이 구금됐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500명 이상이 구금됐다. 연행자 규모는 시위가 컸음을 시사한다.

지난 몇 달 동안 푸틴은 이 전쟁을 직업 군인들로만 치르겠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이제까지 러시아군의 주력은 현역 군인들과 소득을 미끼로 가난한 지방에서 모집된 자원병들이었다.

이번 동원령은 예비군 전체를 동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원병만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치를 —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기도 하다.

TV 연설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방의 목표는



9월 24일 러시아의 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린 반전 시위

우리 나라를 약화시키고, 조각내고, 결국에는 파괴하는 것이다.” 푸틴은 부분적 동원령이 “주권 수호, 안보, 국토 보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다양한 고위력 무기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했다. “이 무기들은 어떤 면에서 나토의 무기들보다 더 강력하다. 우리 국토 보전이 위협받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은 허풍이 아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일부 지역을 러시아에 합병하는 과정이 진행 중임도 분명히 했다. 푸틴은 합병에 형식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할 국민투표를 이번 주말에(9월 23~27일) 치르려 한다.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국민투표를 치르면 이 지역들이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후 우

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공격하면 러시아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생길 것이라는 말이다.

“전술 핵무기”

“전술 핵무기” 사용은 1990년대 후반 이래로 러시아군 군사 교리의 일부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러시아 제국주의가 자신보다 강력하고 세를 확장하는 나토 동맹에 맞서려고 들고 있는 위협천만한 카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거론한 적은 없다.

푸틴의 연설 후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수십만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동원은 전투 경험이 있거나 특수 군사 기술을 보유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지역별로 할당량이 부과될 것인데,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에는 가벼운 할당량이 부과되고, 외진 지역일수록 병력

충원에 더 많이 이용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푸틴 정권은 반발을 줄이려 한다.

정부는 이 동원령을 새 법으로 뒷받침했다. 현대사상 최초로 러시아 형법에 “계엄 하에서”, “전시”에 같은 표현들이 삽입된다.

예비역인 러시아인들은 입영을 기피하거나 탈영하면 형사 처벌받을 것이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동원 시기나 계엄령 하에서나 전시” 모든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진해 포로가 된 것으로 판명된 병사들은 징역 3~10년형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겨냥한 처벌도 새로 생긴다.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국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최대 10년형을 받게 될 것이다.

푸틴의 전쟁 확대는 전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대리전 형태로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경쟁의 파괴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붓고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부추기면서 이런 방향으로의 사태 전개는 거의 필연적이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도 나토는 한 순간도 멈칫하지 않았다. 푸틴이 자신이 위험한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없으리라는 가정은 매우 위험하다.

전쟁과 서방과 러시아 모두의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이 계속돼야 한다. 희망은 러시아의 반전 시위가 성장하고 노동계급과 연계되는 것에 있지, 나토의 무기에 있지 않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3호 / 번역 김준호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 ②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10월 6일(목) 오후 8시

발제 강동훈 <노동자연대> 기자,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벌개혁론 비판> 저자

참가신청 bit.ly/meeting-1006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 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 토론회 영상 보기 bit.ly/wstv-0929

노동자연대 TV